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대한민국, 서울

2008년 6월 16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직이 이렇게 모인 것은 여기 모인 OECD 장관들과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 민중들의 관심사와 열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노동계 행사를 개최하고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OECD와 한국정부에 감사드린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OECD에 제출할 문서를 함께 준비하였고, "시민, 소비자, 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미래 구축" 회의를 개최하였다. 폭넓은 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였고, 이 선언문은 그러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큰 골격

미래의 인터넷 경제를 위한 정책 목표는 인권 보호, 민주적 제도의 증진, 정보에 대한 접근,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저렴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의 제공이라는 큰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인권의 보호와 함께 국제적 인권 기준의 준수와 법치의 존중은 지구적 정보사회 정책을 평가하는 최소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성장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OECD 장관들이 다음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가 검열에 의해, 그리고 내용 필터링, 사적 검열, 소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좀 더 교활한 수단에 의해 지구 곳곳에서 침해되어왔다. 우리는 OECD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의무적 필터링,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국제 표현의 자유 규범하에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 우리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는 기본적 정책 수단으로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RFID와 온라인 신원도용에 대한 최근의 정책 지침서를 이사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데이터보호법을 채택하고 집행할 것과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국제적 데이터 보호기준을 수립할 것을 OECD 국가들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국경 보안, 신분증명, 개인과 관계된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한다.

* 소비자 보호. 신용과 신뢰는 인터넷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OECD는 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다른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정도로 디지털 제품을 포괄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OECD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모바일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사회 권고로 채택할 것과 OECD 회원국이 이 권고를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스팸방지법의 초국가 집행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 고용, 괜찮은 일자리와 기술. 우리는 OECD 회원국이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증진할 것과 노동현장에서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우리는 OECD가 정보통신(ICT)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준수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 지식에 대한 접근 증진. 우리는 정부가 재정지원한 과학·학술 저작물에 대한 공개 접근을 지지하며, 연구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OECD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공 정보에 대한 향상된 접근 및 더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OECD 권고안을 지지한다. OECD 국가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필수적 지식과 문화적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도서관 및 아카이브, 장애인 공동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예외의 중요성에 대해 OECD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CD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는 민주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지구적 인터넷 정책결정은 모든 사람, 국가, 이해당사자의 평등한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OECD 회원국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을 지지하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다수 이해당사자 참여과정(multi-stakeholder process)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 공개표준과 네트워크 중립성의 증진. 표준제정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혁신과 개발을 증진한다. 우리는 공개표준, 공개 데이터포맷,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증진하는 정부조달 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이 특정한 응용프로그램, 기기, 혹은 콘텐츠에 대한 네트워크 제공자의 차별에 반대하고, 혁신, 경제성장,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인터넷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지적재산권 정책의 균형.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창조성, 혁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에 균형된 틀을 유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OECD 정책 지침을 지지한다. OECD 국가들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근거하여 모든 인터넷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제안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위조품 방지 무역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한 사업 행위, 참여적 웹, 전자정부 서비스 전달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 다원적 미디어에 대한 지지. 인터넷은 혁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성장,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민중들의 역량을 위한 보편적 플랫폼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공공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배적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열린 인터넷에 대한 기업 집중의 위협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 OECD에게 극히 중요하다. 융합 및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OECD 정책 지침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이러한 작업의 기반을 제공한다.

* 통합적인 디지털 사회. 인터넷은 모두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은 모든 거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을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적 인터넷 접근,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한다. 장애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촌, 벽지 및 원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 문화적 다양성. 우리는 세계 문화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고, 인터넷 경제가 우리 세계의 언어, 과학, 문학의 진정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시민사회와 노동조직의 이러한 참여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정식화할 때이다. 1998년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 노동계를 위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와 업계를 위한 업계자문위원회(the 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와 비슷한 (시민사회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인권과 민주주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그리고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과 같은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OECD가 이제 시민사회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OECD 시민사회 자문위원회의 생성은 OECD에서 통합, 참여,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민주적 목표의 실현을 돕는데 필요하다. OECD는 인터넷 미래에 관련된 정책 논의를 위한 중요한 포럼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환영하며, OECD 장관들과 회원국들이 자국내의 시민사회와 노동 조직을 완전히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OECD 장관들과 회원국들이 리더십, 교육 및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충고한다. 인터넷 경제의 성공은 단지 기술 확산의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